판단 유보해 혼란 키운 질본, 뒤늦게 "검체 취급 오류"

광주 중·고생 2명 오락가락 판정

민간기관서 첫 양성 판정
4차례 검사 음성판정 불구
질본 애매모호한 입장 취해
광주시는 "음성판정 믿는다"

전혀 다른 곳에 살면서 성별이나 학교, 접촉 동선도 겹치지 않는 광주지역 중·고생 두 명이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채취해 민간기관에 의뢰한 코로나19 검체 결과 때문에 방역 당국이 대혼란에 휩싸였다. 두 명 모두 같은 민간기관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이후 4차례 검사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음성판정을 받은데 이어 결국엔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추가 음성판정이 잇따라 내려지면 확진자가 아닌 의심자로 분류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질병관리본부(질본) 등 보건당국에서 오락가락하는 사이 코로나19 검사의 신뢰성마저 훼손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와 방역 전문가들은 민간기관 1차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긴 했지만, 두 학생 모두 이후 공신력을 갖춘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4차례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점 그리고 밀접접촉자인 가족을 포함한 1000명이 넘는 접촉자들이 음성판정을 받은 점 등을 들어 14일 오후까지도 최종 '음성'이라고 판단했다. 한 방역 전문가는 "민간기관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2명이 추가 4차례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것은 우연치고도 희귀한 사례"라면서 "이 경우 확진판정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전제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거듭된 음성 판정을 수용해 국민 안심은 물론 방역 행정의 낭비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질본측은 이날 오후 5시까지만하더라도 '역학적·의학적 시간상 음성으로 전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와 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오후 6시께 자료를 통해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검체 취급 오류로 인한 원검체 오염 가능성이 높다"며 "당일 검사 수탁기관 객담 검체 검사 과정중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유덕중 1학년 A군과 대광여고 2학년 B양은 11일 오전 광주 한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12일 민간 기관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12일 3차례, 13일 1차례 등 이후 4차례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2차는 광주 서구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했다. 3차는 학생들이 각각 입원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 검체를 채취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했으며 4~5차는 대학병원들이 검체 채취와 검사를 맡았다. 특히 이들 대학병원에선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온 만큼 퇴원기준에 부합하다는 소견도 제시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간주하고, 확진 판단을 유보했다. 역학 조사관도 2명이나 광주에 파견했다.

광주시는 확진자에 준하는 방역 조처를 하면서도 4차례 음성 판정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음성판정을 내린 기관 모두 코로나19 발생 이후 5개월 동안 1만건 이상을 검사한 경험으로 공신력이 인정된 곳이고, 실제 두 학생의 접촉자 1118명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시는 두 학생이 최근 수도권 방문, 해외여행은 물론 방문자 등을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바이러스 수치가 양성과 음성 경계에 있어 확진 판정이 모호한 사례는 종종 있지만, 두 학생 모두 추가 4차례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 등은 양성이 나온 1차 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몇 가지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며 "검체 채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체가 민간기관으로 옮겨지는 동안 원형 변질 가능성, 기구 관리 실태, 검체에 약물 투입하는 과정이 어디서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1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광주 두 학생이 시간이 흐른 후 음성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구상에 100% 민감하고 특이한(정확한) 검사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양성'(가짜 양성)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설명했었다.

질본의 애매모호한 입장 때문에 광주시는 1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두 학생을 33, 34번째 확진자로 발표했다가, 다시 감염 의심자로 정정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14일 오전 광주 시청 브리핑룸에서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1명이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확진판정 받은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청와대 심야 NSC 긴급 화상회의 김여정 '군사 행동' 발언 대응 논의

대화의 끈 유지 의견 우세
통일부 "현 상황 엄중 인식"

청와대는 14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새벽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심야에 긴급 소집된 것은 청와대가 군사 위협까지 불사하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연 것은 14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군사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이 나온 지 불과 3시간여 만이다.

청와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등 우리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김 부부장의 언사에 직접 대응을 삼가며 거리를 둬왔다. 하지만, 이날 NSC를 긴급 개최한 것은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공언한 김 부부장의 위협적 언사를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NSC 회의에서는 일단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분석하기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북한이 군사 행동에 옮기는 경우다. 국지적으로라도 무력 도발을 일으킨다면 남북 군사합의는 물거품이 되고 북미 사이에서 해온 비핵화 중재자·촉진자 역할도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한반도 평화를 국정 기조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 국정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청와대에서는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NSC 회의까지 열어 북한 문제를 논의한 만큼 15일 열리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어떠한 언급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14일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남과 북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남북 간 합의 준수'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방부도 이날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별도 입장을 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낙연, 다음주 '코로나 지휘봉' 내려 놓고 당권 레이스 본격 돌입

24일 활동보고회 후 출마 선언
전당대회 캠프 구축도 속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다음주 '코로나 지휘봉'을 내려놓고 당권 레이스에 돌입한다. 사실상 당권·대권 분리론을 토대로 하는 당내의 견제론을 정면돌파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4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번 주 강원에 이어 다음 주 22일 호남(전주)에서 국난극복위 지역 순회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위원장은 이어 24일 활동보고회를 가진 뒤,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8월 전당대회에서의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당 대표가 되려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당권·대권 분리 규정 때문에 약 7개월만 대표직을 수행하게 되는 데 따른 논란에 대한 견해를 충실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그것(7개월)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엄중한 시간으로, 국난극복의 골든타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난극복 의지에 도움이 되기 위해 당력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 측은 곧 여의도에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인 캠프 조직 정비에 나서는 등 전대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한 것이 단점으로 지적돼 온 만큼 대세론을 앞세워 빠르게 세를 불려가는 모습이다. 이미 설훈, 박광온, 이개호, 전혜숙, 오영훈 등 10여 명의 의원이 주변에서 측면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전대 출마와 관련해 신중한 언행을 유지하고 있지만, 설훈 의원이 라디오에서 "대세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언급하는 등 지지 그룹을 중심으로 이 의원 행보에 힘을 싣는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당권·대권 분리를 토대로 하는 이낙연 위원장에 대한 견제론도 점차 강도를 더하고 있다. 당권에 도전할 예정인 우원식 의원은 14일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을 겨냥해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재고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이 지켜줘야 할 대권 후보들 간의 각축장이 벌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의 소중한 대선 후보에게 큰 상처만 남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권 경쟁자인 홍영표 의원도 지난 12일 B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 의원이 당 대표에 도전하는 문제는, 당내 많은 대선 주자 사이에서 흔쾌한 동의를 얻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